

현재 기술론 방사성물질 제거 불가능...전남 피해 불 보듯

일본 오염수 1년 반~2년 후 방류 결정

전국 수산물 피해 月 375억 예상...생산량 57% '전남산' 오염수 국내 유입 시점 별개로 '수산물 기피' 걱정까지 "오염수 유입 검사 등 모니터링 강화"...정부 유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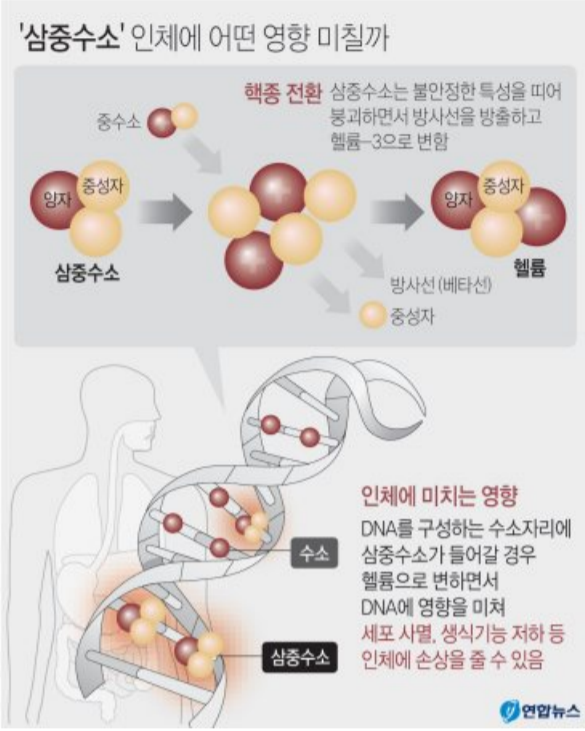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1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하면서 가장 큰 피해는 최인접국인 한국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중에서도 수산물 생산 전국 1위 지역이자, 섬과 갯벌 등 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남지역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방사성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전문가들이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육지 내 보관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국 내 행정절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일본이 쬐개는 1년 반에서 2년 뒤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오염수의 우리 해역 도착 여부와 별개로 국내 수산물까지 기피 현상이 빚어져 어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쌓여온 다량의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 배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으나 일평균 180t씩 그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배출 전, 다핵종저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기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년 반, 늦게는 2년 뒤부터 향후 30년 가까이 방류를 이어간다.

국제 사회 반발 기류 탓인지 일본은 오염수 속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자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천 500 베크렐(Bq) 미만인 걸 때까지만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택했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 당 6만Bq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하며,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역시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일본 어민단체는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탱크 등 육지 보관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비용 문제 등 자국 이익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정부 연구기관 분석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 한 달 이내 전

남 앞바다 등 서해와 제주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앞서 나온 바 있다. 국회 감상의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GEOMAR(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Cs137) 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Bq/㎡의 경우, 한 달 내에도 제주도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의 일방 결정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는 최인접국인 한국이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측 주장대로 방사성물질이 극미량 포함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생선 등에 농축돼

인체 흡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염수 국내 해역 도착 여부와 별개로 방류 강행 시 국내 수산물 기피 현상을 불러와 어떤 피해가 실시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 수산물 피해 규모만 월평균 160억~3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해양수산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내 재래시장 수산물의 40%, 대형마트 20%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수산물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57%를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수산물 생산 총량 327만5514t 가운데, 전남 생산량은 187만7807t(전국대비 57%)에 이른다. 다시마·미역·김 등 해조류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90%(158만5000t), 갑각류 38%(3만t), 패류 22%(10만8000t) 등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일본이 해양 방류 강행 때,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내 해양 방사성물질 유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일본을 국제해양수산소에 제소해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은 내 놓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군공항 이전·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머리 맞댄다

광주시-민주당 의원 당정협 개최...지역 현안·국비 사업 등 논의 예정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등을 논의하는 당정협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당정협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민주당 운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갑)·양향자(서구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내년 국비 사업 등을 논의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사전 자료를 통해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입법화 지원 등 현안건의사업 16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21건의 국비지원 건의사업을 이날 당정협회의를 통해 설명한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도 동의하고 있는 각 절차별 기간을 명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직접지원 재정 확대도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미래전략산업 강화를 위해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의 국비 지원과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도 요청한다.

상생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보터스의(GGM)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서도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과 유류세 환급 한도액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제 혜택 확대와 GGM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함께 건의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호남조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도심융복합특구 조성사업 국가사업 전환 ▲여차프로배구 신규 구단 과주 연구 유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 ▲광주-대구 달비내륙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광주-나주, 광주-회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광주의료원 설립 ▲한국문화기술(GT) 연구원 설립 ▲광주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국립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건립 등도 건의한다.

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2798억원) 등 21건(총사업비 2조118억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36.3%·이재명 23.5%·이낙연 12.3%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4·7 재·보궐선거 이후 진행된 첫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6.3%, 이 지사가 23.5%로 조사됐다. 둘 사이의 격차는 12.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1%, 무소속 홍준표 의원 4.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2%, 정세균 국무총리 2.9%,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3%,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1.5%, 국민의힘 김종민 전 비대위원장 0.6% 순

이었다. 연령대별로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47.6%), 50대(41.4%), 30대(34.3%)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40대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9.0%), 대전·세종·충청(44.6%), 서울(38.8%), 부산·울산·경남(38.7%) 등에서 윤 전 총장 지지도가 높았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4%로, 이 지사(36.0%)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가상 맞대결에서도 50.9%대 31.4%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의 거취를 두고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3.1%, 제3세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첨단우리병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